

企劃論文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의 주권회복

김 명 섭*

I. 서론	IV. 노몬항(Nomonhan) 격전과 진주만 공격
II.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V.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주권회복
III.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서막: 만주사변(滿洲事變)과 중일전쟁	VI. 결론

I. 서론

한국(대한제국)은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강점되었고, 다시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 패배를 통해 해방을 맞이했다. 1895년 청일전쟁을 마감하는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은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른 러시아와 일전을 벌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6일(미국현지시각 9월 5일) 뉴햄프셔주 포트머스 해군기지에서 미국의 중재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11월 17일 일본은 한국(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하였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이른바 ‘옥음방송’이 있기까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1914년 세계대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39년 노몬항(Nomonhan) 전투, 그리고 1941년 진주만공습으로 촉발된 태평양전쟁 등의 주도국 내지 주요한 참가국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의 이른바 ‘옥음방송’은 전쟁행위의 중지와 연합국이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국제정치 전공

발표한 (포츠담) 공동선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었다 일본이 민족적 문명적 표준으로 앞서있던 ‘천황’의 공개방송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물론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대표단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기까지 한 국민족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무력통치는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은 ‘미완의 해방’이었고, 그 자체로서 주권회복은 아니었다 다만 일본의 전쟁 패배는 한국에게 주권회복을 향한 해방공간을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해방을 민족해방운동사적 차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소중하지만, 일본이 주도했거나 참가했던 일련의 긴 전쟁들을 둘러싼 국제사의 관점에서 파악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이 벌인 일련의 전쟁과 한국의 해방이 지니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추축국들과 프랑스, 영국, 소련, 미국, 중국 등의 연합국들이 벌인 전쟁”이다.¹⁾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 볼 때, 제2차 세계대전이란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를 뒤흔협정 위반으로 간주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일 선전포고에서부터,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기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추축국들(Axis)에 대한 중국,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등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유럽중심적 의미설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1차 세계대전 역시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당시 유럽의 교전국들이 전세계적인 식민지를 보유하고 식민지의 자원을 유럽전장에 투여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대전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유럽중심적인 명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의 기점을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침공(소련과의 분할점령)으로 못 박는 것은 다분히 유럽중심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1) *Petit Robert 2*, Paris: Le Robert, 1989, p. 780.

과 관련하여 설정된 유럽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하위범주 역시 그러하다.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그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해 두 개의 전장으로 나누어 고찰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아프리카전장과 아시아 태평양전장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중첩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흔히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중일전쟁, 15년 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으로 명명되어왔다. 각각의 명칭은 전쟁의 성격에 관한 상이한 인식을 담고 있다. 전쟁을 어떻게 명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쟁의 기원과 책임, 그리고 전후처리 등과 관련된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명명(naming of war)은 명명의 전쟁(war on naming)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한국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태평양전쟁’(the Pacific War)이란 1941년 12월 8일(하와이시각으로 12월 7일)에 개시된 일본육해군의 싱가포르(당시 영국의 식민지) 기습공격과 일본 해군 연합함대의 진주만 미 해군기지 기습공격을 기점으로 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 쇼와천황의 이른바 ‘옥음방송’에 이어서 9월 2일 일본이 연합군에 대한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까지의 전쟁을 일컫는 용어이다. 태평양전쟁이란 용어와 더불어 태평양전쟁(시)기라는 용어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²⁾ 그러나 ‘태평양전쟁’ 또는 ‘태평양전쟁(시)기’라는 명칭은 자칫 이 기간 중 아시아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던 전쟁의 다른 일면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는 명칭은 일찍이 동아(東亞)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던 일본의 명명이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를 넘어서 대동아로 나아가는 동심원적 확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었다. 이 명칭은 종전 이후 폐기되었고, 대신 미국이 사용하던 Pacific War 라는 명칭을 번역한 태평양전쟁이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일본이 사용했던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것 자체가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의 폐기는 중요한 손실을 가져오

2) 김인호,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생산증강 정책과 그 실상」, 『역사와 경계』 52집(2004); 권명아, 「태평양전쟁기 남방 종족지와 제국의 판타지」, 방기중(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혜안, 2005), 163~196쪽

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추동했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자원이 범아시아 주의였다는 사실이 가려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서양문명의 동진에 맞서 동양 문명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일본의 전쟁논리에 대한 몰이해를 낳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따옴표를 사용해서라도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살려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되, 위안부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고유명사로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면³⁾ 같은 맥락에서 작은따옴표를 사용한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도 그러하다.⁴⁾

‘미·일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에 관한 아키라 이리에(Akira Iriye)의 주장도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 보다 더 아시아대륙 방면에서 전개된 전쟁의 양상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만연은 자칫 미일전쟁시기의 극복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간과한 채, 미일컨소시움을 통해 완성되었거나 될 것이라는 역사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동아전쟁’ 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가 미·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적합해 보인다. 다만 ‘대동아전쟁’이라는 명칭의 경우 ‘대동아’라는 개념이 출현한 시점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동아시아에서의 2차 대전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3)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영어로는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한국어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친 ‘대동아전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로 굳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그것이 일본군의 공식용어로서 그 역사적 함의를 단어의 의미와 결부시켜 반어적으로 되짚어보자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안부’라는 단어에 반드시 따옴표를 쳐서 표기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전쟁 시기에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위안부가 전적으로 일본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위안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정부와 군이 위안소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는 지금,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와 군의 관여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당시 군 문서에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index.jsp>.

5) ‘미·일전쟁’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는 Iriye, Akira, “Japan Against the ABCD powers,” Akira Iriye and Warren Cohen ed.,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Wartime Asia, 1931~1949*, Wilmington, Delaware: SR Books, 1990, p. 224.

III.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서막: 만주사변(滿洲事變)과 중일전쟁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은 비단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만주사변이 1차 세계대전의 광기를 봉인했던 베르사이유체제, 특히 워싱턴회의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9·18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후인 1931년 9월 22일 스티imson(Henry L. Stimson) 미국무장관은 일본군의 만주에 대한 행동은 단지 중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9개국조약, 부전조약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통보하였다.⁶⁾

그러나 일본군은 1932년 초까지 만주의 거의 전역을 점령하고, 같은 해 3월 1일에는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의 성립을 선포하여 만주를 일본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국제연맹은 중국 측의 제소(提訴)에 따라 리튼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단의 보고서를 채택,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허성(熱河省)마저 점령하고 1933년 3월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하였다. 1918년 베르사이유평화회의와 관련하여 “영미 분위의 평화주의를 배격한다”라는 글을 썼던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12)는 1933년 2월 “세계의 현상을 개조하자”라는 논고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1918년의 글과 그 근간을 같이하는 것이었다.⁷⁾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국내적 배경에는 쇼와(昭和) 공황에 따른 사회적 위기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군부 파시즘체제의 수립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만주에 대한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27년 26대 수상에 취임한 다나카 기시(田中義一)의 구상에 입각한 만주침략정책이 그것이었다. 특히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만주로의 팽창을 모색했다. 당시 만주에는 이미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획득한 특수권익이 있었다. 중국의 국권회복운동, 1928년부터 스탈린이 주도한 제 5개년계획의 진척 등에 직면하여, 일본은 만주 전체를 점거할 계획을 모의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만주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봉천(奉天 瀋陽) 외곽에서 류타오거우사건(柳條溝事件)을 도모한다. 일본군 스스로 만철(滿鐵)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측 소행이라고 트집잡아 만철 연선(沿線)에서 북만주(동베이) 東

6) 白井勝美, 송한용(역), 『중일외교사연구』(선인, 2004), 281쪽

7) 위의 책, 287~288쪽.

北(지방)으로 일거에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국제정치적으로 일본은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혁명과 연이은 시베리아출병이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공산주의 소련을 의식하여 대륙에 대한 방공(防共)을 표방하고 있었다. 첫째, 일본은 소련의 등장으로 인해 러일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 1905년 9월 5일)에서 확보한 특수이익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비록 소련이 포츠머스조약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러일전쟁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태동될 수 있었다. 셋째, 소련의 국가이념은 제국주의화한 일본과는 상극에 놓여 있었다. 넷째, 소련의 국가이념이 이미 각국의 공산당 건설과 반식민운동에 미치고 있던 영향들을 고려해볼 때, 조선을 비롯한 일본 점령지의 ‘피압박인민’에게 미칠 영향은 일본으로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었다.⁸⁾

이러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국을 수립한 일본 제국주의 앞에는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의 길은 영일동맹의 오랜 전통에 따라 소련을 주된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대소 방공(防共)연대를 강화하는 대신 중국의 국공분열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조선, 만주국 등이 단결하여 방공(防共)블록을 형성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맞서고 있는 장제스의 국민당정부를 이 방공(防共)블록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이것은 이시하라 간지의 구상에 기초한 5족 협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노선이었다.⁹⁾ 이러한 방공(防共)블록에 대한 영국과 미국 등의 외곽적 후원 역시 기대할만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길은 만주에 이어 중국을 침략하여 점령하거나, 동남아시아지역의 유럽 식민지들을 쟁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보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동아시아지역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던 유럽국가들, 그리고 유럽국가들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던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31년 만주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미 영미와 합의했던 워싱턴체제, 부전조

8) 러시아혁명은 1918년 독일혁명, 1921년 프랑스공산당 창당, 1922년 일본공산당 창당, 1920년 인도네시아공산당 창당,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929년 호치민에 의한 인도차이나 공산당 창당, 1926년 영국의 제네스트, 1929년 원산제네스트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9) Sekiguchi, Takeo, "The Wartime Role of Manchoukuo," *Contemporary Japan: A Review of East Asiatic Affairs* 13, February 1944, pp. 176-184.

약 등으로부터의 일탈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일탈에 대해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영국과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소련에 대한 방파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 데 이어, 1934년 일본은 미국의 유럽에 대한 먼로독트린을 모방한 천우성명(天羽声明; Amo Eijiro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이어서 1936년에는 런던 군축회의에서마저 탈퇴했다. 같은 해 일본 국내에서는 통제파(統制派)와 갈등을 빚던 황도파(皇道派)의 급진 파시스트 청년장교들에 의한 쿠데타(2·26 사건)가 일어났다. 비록 이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이를 기회로 일본의 정치 지도권을 군부가 장악하고, 대규모의 군비확장에 나서게 되었다.

1936년 11월 25일 일본과 독일은 베를린에서 반(反)공산주의인터내셔널협정을 체결하였다. 소련과 일본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것은 영국과 미국이 선호하는 구도였다. 향후 일본의 주된 타격방향은 소련이 될 것인가? 이 협정은 1937년 11월 6일 로마에서 이탈리아가 추가된 3국간 협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신 소련은 1938년 8월 중국의 장제스 국민정부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¹⁰⁾

1936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시안사변(西安事變, Xian Incident)은 일본의 전쟁노선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시안사변으로 인해 일본은 중국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더 이상 국제연맹이나 영·미에 호소하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장제스가 시안사변을 통해 수락한 항일국공합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게 되었다. 일본의 공격방향도 소련이나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선에 맞추어지게 되었다. 영·미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이 지니는 의미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내의 항일국공합작체제와 일본의 파시즘체제가 대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北京) 교외의 루거우차오(蘆溝橋)라는 곳에서 일본군 분견대와 중국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루거우차오사건(蘆溝橋事件, Marco Polo Bridge Incident)의 처리과정을 빌미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고 명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소련과의 전쟁에 앞서 중국과의 일전의 길로 들어섰다.

10) 김용구, 『세계외교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768쪽.

1937년 11월 일본은 전쟁의 수뇌가 될大本營(the Imperial Headquarters)을 설립하였다. 루거우차오사건 이후 베이징과 텐진(天津)을 점령한 일본은 상하이(上海)로 진공했다. 상하이에서 의외로 고전한 일본군은 1937년 12월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南京)으로 진격하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다¹¹⁾

이어서 일본군은 우한(武漢)을 공략하고 광둥(廣東)에서 산시(山西)에 이르는 남북 10개 성(省)과 주요 도시의 대부분을 점거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유격전에 따라 일본군은 광범한 전선에서 ‘점(도시)과 선(도로)’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삼전작전(三全作戰; loot all, kill all, burn all)과 삼광작전(三光作戰; 殺光·燒光·搶光)으로 맞섰고, 약 2천 5백만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의 사망을 초래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우선 일본주재 미국대사 그루(Joseph Grew)의 견해에 따라 양교전국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¹²⁾ 1935년 이후 미국은 중립법(Neutrality Act)의 구속을 받고 있었다. 그루는 미국 정부에 대하여 첫째, 중일전쟁 불개입, 둘째, 중국 내 미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 보호, 셋째 교전양측과의 우호관계 유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한 달 후 헐(Hull) 미국무장관은 국제 거류지에 있는 미국의 이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하이에 약 1천 2백명의 해병대를 파견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 일본 정부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에서 모든 조약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국으로부터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루거우차오사건이 발발한 지 약 3달 후인 1937년 10월 5일 시카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호전국에 대한 ‘격리(quarantine)’를 선언했다. 전염병이 퍼져 나가기 시작할 때 공동사회는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동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

11) 당시의 학살상황에 관해서는 Brook, Timothy, *Documents on the Rape of Nank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일본 측의 반론으로는 Masaaki, Tanaka, *What Really Happened in Nanking*, Tokyo: Sekai Shuppan, 2000[Kenkosha, 1987]; Chang, Iris, *The Rape of Nanking*, Penguin, 1998.

12) 조셉 그루는 대표적인 일본 지지자였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했다. Schonberger, Howard B., *Aftermath of War: Americans and the Remaking of Japan, 1945~1952*, Kent, Ohio/London, England: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9. 이 책은 그루 이외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 닷지(T. Dodge), 켈(Kern),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등을 통해 미국의 대일본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

들을 격리시키는데 찬성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는 세계 평화를 널리 실현하기 위해 일치단결할 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자국의 동포들에게도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단순한 독립이나 중립으로는 전염병에 대항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루즈벨트가 격리선언을 한 지 하루만인 1937년 10월 6일 국제연맹 총회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1922년 2월 6일 중국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보장했던 9개국 조약(Nine-Power Treaty)과 1929년 전쟁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금지한 부전조약(Briand-Kellog Pact)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연맹총회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일본에 반대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¹³⁾

10월 15일 벨기에 정부는 9개국조약 체 조에 기초하여 조약국회의를 소집하자는 취지의 초청장을 각국에 발송하였다. 일본은 이 초청을 사양했다. 국제연맹이 일본측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본을 비난한 것, 중국과 일본 양 국가들 간의 문제로서 다른 제3의 국가들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 등이 거절의 사유였다. 독일 또한 참가를 거부했다. 브뤼셀회의는 1937년 11월 3일부터 개최되었으나, 9개국조약의 원리가 중일전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다.¹⁴⁾ 그러나 일본은 계속하여 중국에서의 행동은 일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위에 입각하여 취해진 것으로서 9개국조약이나 부전조약은 적용될 수 없으며 중·일간의 분쟁은 중국과 일본 양국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⁵⁾

1937년 10월의 브뤼셀회의 이후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악화되었다. 중일전쟁이 가열되자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의 중국으로부터의 철수를 명령했다. 이 철수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일본 군인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중국에 있는 미국인의 학교와 병원들은 분명히 지붕에 성조기를 게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군의 폭격을 받아 손상을 입기도 했다. 1937년 12월 12일 양쯔강에서 난징으로부터 철수하는 미국 시민들과 스탠더드 오일 유조선은 호위하고 있던 미국전함 파나이(Panay)호가 일본 공군기의 폭격을 받아 두 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3) <http://www.ibiblio.org/hyperwat/Dip/PaW/PaW-7.html>.

14) 白井勝美, 앞의 책, 316~325쪽.

15) <http://www.ibiblio.org/hyperwat/Dip/PaW/PaW-7.html>.

이 파나이호의 침몰장면은 미국의 촬영기사들에 의해 녹화되어 미국 전역의 영화관에서 뉴스영화를 통해 상영되었다. 파나이호 사건은 미국의 대일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써 사태는 진정되었다. 일본은 손해 배상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여 1938년 20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미국에 지급함으로써 사태를 봉합할 수 있었다.¹⁶⁾

국제조약의 위반과 파나이호 사건 등으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은 새로운 논법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고자 했다. 그것은 일찍이 미국이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통해 서반구에서 행했던 것과 유사하게 일본이 서구문명권에 기초한 국제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권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다. 1938년 1월 코노에 내각은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 the New East Asia Order)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National mobilization Law)을 실시했다. 1938년 9월 29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간에 맺어진 뮌헨협정(Munich agreement)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일부인 주데텐(Sudeten) 지역이 독일에 할양된 것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선례를 만들어 주었다.

1938년 11월 3일 일본 외무성은 다시 성명을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안정을 보장할 신질서, 즉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일본, 만주국, 중국 간의 상호 원조와 협조의 삼각관계를 토대로 하는 신질서의 수립에 착수했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1922년 2월 6일 중국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보장했던 9개국조약을 더 이상 준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과거의 개념이나 원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중국이 구미에 의존하여 일본을 배제하는 것을 비난하며 아시아주의에 기초한 ‘동아신질서’를 주장했다. 일본의 동아신질서 선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1938년 12월 31일 미국의 전통적인 문호개방정책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킬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신질서와 관련하여 그 주권 하에

16) USS Panay Sunk. <http://history.sandiego.edu/gen/st/~pbugler/>.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신질서(new order) 라는 용어와 조건을 규정하는 어떠한 국가의 권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¹⁷⁾

동아신질서론과 더불어 일본은 군사적 측면에서 1938년 가을까지 파죽지세로 중국을 밀어붙였지만 전세는 장기화될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 시기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중국공산군을 중심으로 한 해방지역이 확대되고, 국민정부군에 의한 반격도 이루어졌다. 중일전쟁의 장기화는 일본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켰다. 당시 일본은 석유, 고철, 면화 등 중요한 군수물자의 반 이상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1939년으로 접어들면서 유럽정세의 긴박성 때문에 영국이 중국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자, 대신 미국이 중국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처칠은 일본의 진주만공습이 있기 직전까지도 루즈벨트에게 중국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¹⁸⁾ 1939년 7월 미국은 미일통상조약의 파기를 공고하고 언제든지 일본에 대한 군수물자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한편에서는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영미와의 대립 격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전쟁노선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IV. 노몬항(Nomonhan) 격전과 진주만공격

1939년(昭和14) 5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9월 15일까지 만주국 서북지역 외몽고의 국경지대인 노몬항(Nomonhan; 러시아명, Khalkhin-Gol)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소 간의 격전은 일본의 전쟁노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코마츠바라 미치타로(小松原 道太郎) 소장이 이끌던 일본군 제23 보병사단은 훗날 4번씩이나 소련영웅의 칭호를 받게 되는 2차 대전의 영웅 주코프(Georgy K. Zhukov)가 이끄는 소련군과 격돌하여 연 인원 8만 명이 참가하는 대전투를 벌이다가 철수

17) <http://www.mtholyoke.edu/acad/intrel/WorldWar2/japan.htm>.

18) Tel. from Winston Churchill to FDR, 26 Nov 1941. 이 전문은 일본과의 화평조건(modus vivendi)에 관한 루즈벨트의 1941년 11월 24일자 전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Iriye, Akira, *Pearl Harbor and the Coming of the Pacific War: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and Essays*, Boston/New York: Bedford/St. Martin's, 1999, pp. 70-72.

하고 말았다.¹⁹⁾ 당시 기동성 있는 기갑전차를 활용한 슈코프의 전술은 한 달 후 폴란드를 전격 침공하는 나치독일의 기계화사단의 전술구사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었다. 하지만 노몬항전투는 당시 서방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²⁰⁾

1939년 8월 노몬항전투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일본은 극동소련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막강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달 23일 모스크바에서 나치의 외상 리벤트로프(Joachim von Ribbentrop)와 소련 외상 몰로토프, 그리고 스탈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체결된 독소불가침조약(Treaty of Nonaggression between Germany and the USSR)은 일본의 전략적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1941년 4월 13일 일소중립조약이 체결된 이후까지도 일본은 소련에 대한 진공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에 휩싸이게 되었고,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내각은 즉각 유럽에 대한 불개입과 중국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곧 3국의 반코민테른 협정을 군사 동맹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협상들을 중지했다. 아베 내각은 소비물자의 부족과 원료의 불충분한 공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와해되었고,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장군이 총리직을 물려받았다.

일본과 나치 독일의 관계는 점차 강화되었고, 독일을 방문하여 나치 독일과의 연대입장을 분명히 한 왕정위(汪精衛)는 1940년 장제스가 난징에서 철수한 이후 난징국민정부를 수립하여 본격적인 방공친일노선을 걷기 시작했다.²¹⁾ 1940년 5월 서유럽에서 독일이 거둔 승전소식은 이러한 방공연대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일본의 정책은 유럽의 전황에 편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1940년 6월 17일 프랑스 패탕원수의 항복에 고무된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유럽제국들의 식민지들을 확보함으로써 중일전쟁의 병참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940년(昭和15) 7월 22일 제2차 코노에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대본영정부 연락

19) G. 슈코프 이외에는 냉전시대의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 만이 4번에 걸쳐 소련영웅 칭호를 받았다

20) Coox, Alvin D., *Nomonhan: Japan against Russia, 193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김용구, 앞의 책, 768~769쪽

21) 배경한, 「중일전쟁 시기 중국에서의 동아연맹운동과 왕정위정권」, 『중국근현대사연구』 21권(2004), 95~121쪽, 문명기, 「중일전쟁 초기(1937~39) 왕정위파의 화평운동과 화평이론」, 『동양사학연구』, 71권(2000), 117~155쪽.

회의는 ‘세계정세에 따른 시국처리요강’을 결정했다. 이 ‘시국처리요강’은 ‘세계정세의 변국(變局)에 대처하여 내외의 정세를 개선하고 조속히 중일전쟁의 해결을 촉진함과 아울러 호기를 포착하여 남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일전쟁의 처리,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추축의 강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군사기지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의 주요자원 확보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1940년 7월 26일에 승인된 이 정책안은 ‘동아신질서에서 진일보한’ 대동아신질서(大東亞新秩序)에 관한 구상을 담고 있었다²²⁾ 이것은 대동아공영권론이 일본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²³⁾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을 중심으로 세 개의 동심원적 지역권을 상정했는데, 첫 번째는 내역(內域) 혹은 내권(內圈)이라고 분류되는 지역권으로서 일본과 조선(內鮮一體), 만주를 비롯하여 연해주, 그리고 양쯔강 이남의 우한과 상하이 등을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두 번째는 소동아(小東亞)라고 분류되는 지역권으로서 중국과 시베리아,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등을 포괄하는 지역권이다. 세 번째가 대동아(大東亞)로서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 그리고 태평양열도를 포괄하는 지역권이다.

일본은 소동아건설을 위해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이어서 영국과 그 동맹국들 간의 분쟁을 거쳐야만 “대동아”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²⁴⁾ 특히, 도조 히데키의 심복이자 대동아공영권구상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무라 미노루에게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중심의 위성국가에서 이탈시켜 일본중심의 지역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대동아공영권론의 선전과 아울러 아시아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⁵⁾

22) Yano, Toru,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etting the stage for the cold war in Southeast Asia*, Kyoto: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Kyoto University, 1975, pp. 10-11; Spinks, Charles Nelson, “The Man Behind in Japan,” *Asia & Americas* 43, April 1943, pp. 218-221.

23) Frei, Henry P., *Japan's Southward Advance and Australia*, Carlton, Victor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91, pp. 178, 187-188.

24) *Ibid.*, p. 208.

25) *Ibid.*, p. 208.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유럽에서 히틀러가 거두고 있던 승리에 고무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거느리고 있던 아시아의 식민지들에 주목했다. 일본의 군부와 팽창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북수남진(北守南進)이라는 전략적인 구호가 점차 만연했다. 1940년 9월 코노에 내각은 대동아신질서 구상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상으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일본·만주·중국을 주축으로 하여 위임통치령 하에 있는 독일의 제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태평양제도, 태국, 영국령 말레이시아, 영국령 보르네오,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 등을 포함하는 웅대한 영토 범위의 수립이었다.

일본은 위의 지역들에서 석유·고무 등, 그리고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광 등을 확보함으로써 자족적이고 일본 독점적인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2차 코노에 내각은 이러한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1940년 9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대한 무력진주(武力進駐)를 감행했다. 1940년 9월 27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국 간의 추축동맹(Axis Alliance)이 구축되었다. 3국 동맹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유럽에서의 지도권과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지도권을 상호 승인한다는, 파시즘 국가에 의한 세계 재분할 협정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유럽전쟁과 중일전쟁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제3국(특히, 미국)이 동맹국들 중 어느 한 나라를 공격했을 경우의 상호 원조를 약속하고 있다. 3국 동맹의 성립은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유럽에서의 전쟁을 연결시킨 조약이었다.²⁶⁾

3국동맹의 발표에 대해 미국의 할(Hull) 국무장관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관계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²⁷⁾ 대신 1940년 10월 8일 주미대사 호리누치가 스스로 방문하였을 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²⁸⁾ 미국은 진주만에 해군 작전 기지를 건설하였고, 루즈벨트는 당시 기동 연습을 위해 하와이에 정박 중이던 미국 태평양 함대에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그 곳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일본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이용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의 현 질서를 와해시킬지도 모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력의 과시였다.

26) 3국 동맹조약의 영문 번역본을 참조 U. S. Department of State, *Peace and War: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31-1941*,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1983], pp. 571-572.

27) *Ibid.*

28) *Ibid.*, pp. 576-579.

1941년(昭和16) 4월 제2차 코노에 내각의 외상 마쓰오카 요스께(松岡洋右)는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했다.²⁹⁾ 일본의 의도는 최종적인 적을 소련으로 보면서도 전쟁에 필요한 남방자원의 확보를 위해 일시 북방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소련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세력팽창을 이용해서 제정러시아시절부터 중국과 빚어왔던 국경분쟁을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했고, 일본이 소련과 마찰을 빚기 보다는 동남아시아지역으로 팽창해주시기를 선호했다. 그러나 일본과 소련 간의 조약체결은 영국과 미국의 의혹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이 전통적인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소련과 중립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 우려하고 있던 일본의 동남아진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41년 4월 22일 마쓰오카 요스께(松岡洋右) 외상은 6주 간의 유럽여행을 마치고 도쿄로 귀환하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교섭을 개시했지만 유럽의 전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섭은 순조로울 수 없었다. 3국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미국과 교섭하는 것이나, 일소중립조약을 맺은 것 모두 대미교섭에 있어서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과 소련 사이의 개전은 일본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을 향한 독일과의 협공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1년 7월 2일 천황이 임석한大本영정부연락회의에서 ‘정세의 추이에 따른 제국국책(帝國國策) 요강’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영국과 미국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방진출 태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유리하게 진전되었을 경우에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소련은 유럽 전선에서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했다.

1941년 7월 23일 일본은 비시정부와의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프랑스로 인도차이나의 남부로 진주하여 그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이 결정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의외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미국과의 개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무장관 대행 웰스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핵심적 문제(the vital problem of our national security)”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³⁰⁾ 7월 24

29) 일소중립조약의 영어원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yale.edu/lawweb/avalon/wwii/s1.htm>.

30) “Acting Secretary of State Sumner Welles’ statement on Japanese-French Collaboration in

일 백악관을 방문한 주미 대사에게 루즈벨트는 석유를 얻기 위한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과의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난 2년 이상 대일 원유수출을 허용해 왔음을 상기시켰다.³¹⁾ 7월 25일 루즈벨트는 미국 내 일본자산과 중국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발표하였다.³²⁾ 7월 29일 일본은 프랑스 비시정부와 인도차이나의 군사적 방위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³³⁾

1941년 8월 루즈벨트와 처칠은 전격적으로 대서양에서의 해상회담을 개최했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서양헌장(The Atlantic Charter)이라고 불린 이 합의문은 민족자결, 영토보전, 경제적 국제주의, 사회보장, 군비축소, 국제협조 등에 관한 8개조를 포함하고 있었다.³⁴⁾ 1927년에 작성된 영국해군의 전쟁플랜은 당시까지 영국이 미국과의 전쟁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서양헌장은 미국에 대한 영국의 태도가 완전히 불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대서양에서 무력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다.³⁵⁾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서양헌장은 일본을 위협하는 영미동맹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코노에 내각은 한편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전쟁 준비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교섭을 기대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1941년 9월 6일의 어전회의에서는 ‘제국국책 수행요령’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일미교섭과 미국에 대한 전쟁준비가 병행되었다. 10월 하순까지 영국과 미국에 대한 전쟁준비를 완료하기로 하여, 영국과 미국에 대한 개전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다. 1941년 10월 코노에수상이 사임하였다. 사임 당시 코노에는 일미교섭타결의 중요 조건인

Indochina,” 24 July 1941,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6 July 1941.

31) “Memorandum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Welles) on a Meeting Between President Roosevelt and the Japanese Ambassador on the Japanese Occupation of Indochina,” 24 July 1941 in U. S. Department of State, *Peace and War*, pp. 699~702,

32) 《*New York Times*》, 26 July 1941.

33) <http://www.ibiblio.org/pha/policy/1941/410729a.html>.

34) Brinkley, Douglas and David R. Facey-Crowther, *The Atlantic Charter*, Macmillan: London, 1994.

35) 1927년 영국해군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Ovendale, Ritchie, *Anglo-American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MacMillan Press, 1998, p. 24.

중국 본토에서의 철병에 반대하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육상(陸相) 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로써 주전파인 도조가 내각을 조직하게 되었다. 천황은 도조에게 ‘제국국책 수행요령’의 재검토를 명했다. 도조내각은 11월 5일의 어전회의에서 최종적인 일미교섭안을 결정했으나,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국무장관 각서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일미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을 맞았다. 12월 1일의 어전회의에서 일본은 최종적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대한 전쟁을 결의했다. 그 일주일 후인 12월 8일 일본의 육해군은 진주만공격(真珠湾攻撃, Pearl Harbor Attack)과 영국 점령 하에 있던 말레이반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³⁶⁾ 이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자 “국민정부의 관료들은 마치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돌아다니며 기쁨을 나누었다.”³⁷⁾ 중국과 미국은 확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유럽에서의 전쟁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합쳐지게 되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공격으로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전개된 아시아 태평양전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⁸⁾

첫 번째 시기는 1941년 12월 8일 진주만공습과 말레이상륙작전으로부터 1942년 6월 미드웨이해전까지이다. 이 시기는 일본의 공세기로서 1942년 2월 영국 해군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들 중 하나로 기억되는 홍콩함락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속하게 일본의 점령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미드웨이 해전에서부터 1943년 2월 일본군의 과달카날섬(Guadalcanal) 철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미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과달카날 철수부터 1944년 7월 일본군의 사이판 철수까지의 시기이다. 태평양에서의 전쟁의 승패는 이 시기에 사실상 명확해졌다.

36) U. S. Department of State, *Peace and War*, pp. 118~149.

37) Suyin, Han, 長尾喜又(역), 『無島の夏』(春秋社, 1972), 230쪽, 白井勝美 앞의 책 483 쪽에서 재인용.

38) 흔히 전쟁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기도 하나 필자는 다섯 개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3분론으로는 다음을 참고. Williams, David, *Defending Japan's Pacific War: The Kyoto School Philosophers and post-White pow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pp. xxii~xxiii.

네 번째 시기는 1944년 7월 일본의 사이판 철수로부터 1945년 5월 8일 독일항복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이판의 함락으로 일본본토에 대한 폭격이 가능해진 시기로서 일본이 가능한 유리한 방어선을 모색하면서 전쟁을 지속하였으나 이 오지마전투(45년 2월 19일), 오키나와전투(45년 4월 1일~6월 22일) 등에서 잇달아 패퇴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보다 분명해진 시기이다.³⁹⁾ 이 시기 연합국은 1945년 2월의 얄타협정을 통해 일정한 전후처리방침을 합의했다.

다섯 번째 시기는 1945년 5월 8일 독일항복부터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함상에서 일본대표단이 항복문서에 서명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본의 패전이 기정사실화되는 한편,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하고자 최후의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1945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의 포츠담회담, 원폭투하, 소련참전이 이루어졌으며 8월 15일 일본왕의 이른바 ‘옥음방송’을 통해 전쟁행위의 중지가 선언되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은 (1) 자본주의 제국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쟁, (2) 피압박민족의 반제민족해방전쟁, (3)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간의 전쟁, (4) 파시즘 대 범민주세력(자유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간의 전쟁, 그리고 (5) 서로 다른 문명권들 간의 전쟁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일본이 1942년 1월부터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식화했던 것은 (5)의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2)와 (4)의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인들은 이러한 논리를 동원하여 제국주의체제에 맞서 분출하는 탈식민적 저항의 흐름이 일본제국이 아니라 서양제국을 향하도록 도모했다.⁴⁰⁾

39)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일본의 저항은 미국 내부에서 일본본토에 대한 상륙작전이 가져올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 대안으로서의 원폭투하로 가는 길을 닦았다. Skates, John Ray, *The Invasion of Japan: Alternative to the Bomb*,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40) 김명섭,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b), 279쪽.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던 선전수사 중의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금과 은 중에서 무엇이 더 귀중한가? (...) 이 세계도 백인종과 황인종으로 구성된다. 백이 더 강해 보이지만, 둘을 합치면 무엇이 남는가? 황색은 백색보다 강하다.” 당시를 경험했던 한 베트남인은 이러한 선전수사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Chronique d'une guerre oubliée: La guerre d'Indochine, 1945-1954*. Cassettes Radio France. 1er coffret: Saïgon, perle de l'Empire.

V.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주권회복

일본의 패전은 미국의 승리인가?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패전은 중국의 승리인가? 이것 역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일본의 패전에 더 기여했을까? 태평양전쟁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그리고 영국)의 기여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전쟁을 놓고 본다면 중국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유로 대서양전쟁과 관련하여 그 승전기여도에 대한 소련과 미국의 평가가 상이했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시아 태평양전쟁 승전기여도에 대한 역사해석의 문제는 향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의 전후 구상과 유럽제국들의 전후 구상 간의 긴장도 팽배했다. 일찍이 1차 대전 이후 윌슨의 좌절을 윌슨정부의 고위관료로서 목도했던 루즈벨트는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에 앞서 미국 연안의 대서양으로 처칠을 불러 대서양헌장을 체결한 바 있다. 대서양헌장의 서두는 유럽제국주의의 영토야욕에 대한 췌기를 박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 이후 유럽의 제국들은 전전상황(戰前狀況, status quo ante bellum) 원칙을 내세워 식민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영국은 일부 지역에서 점유지 고수의 원칙(Uti possidetis)에 경도되었다⁴¹⁾ 결국 영국은 1956년 런던협상에 가서야 비로소 1957년 8월 31일을 기해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독립을 인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1984년에 가서야 홍콩을 1997년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는 1949년 5월 7일 럼-반 로이엔 협정(the Rum-Van Roijen agreement)을 체결할 때까지 제국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고,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⁴²⁾ 프랑스는 1954년 디엔 비엔 푸에서의 참패를 겪을 때까지 인도차이나의 독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르투갈령 동티모르는 1975년에 가서야 독립을 선

41) 국제적으로 점유지 고수의 원칙이 관철된 경우는 1871년 프러시아가 프랑스와의 전쟁을 통해 전취한 알자스-로렌지역의 점유를 영속화한 경우, 1964년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의 국경문제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42) 탈식민화 대신 재식민화를 도모했던 네덜란드인들의 노력에 관해서는 Springhall, John, *Decolonization since 1945: The Collapse of European Overseas Empires*, New York: Palgrave, 2001, pp. 36-38.

언할 수 있었지만, 동티모르전쟁의 씨앗을 남겨놓았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1987년에 가서야 마카오를 1999년에 반환하겠다는 협정에 조인했다⁴³⁾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일부 지역에서 식민질서의 복원을 희망했던 것은 전전상황으로의 복원이라는 전후처리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석은 분할할 수 있었다. 1941년 진주만공습 이전의 상황인가, 아니면 1937년 중일전쟁 이전의 상황인가, 혹은 1931년 만주사변 이전의 상황인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시점을 1931년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주권회복의 논거는 미약했다. 한일합방조약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nullity ab initio)이라는 한국 측에 가장 유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이유평화체제를 통해 당시 일본영토에 대한 영유권이 기정사실(fait accompli)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제법(inter-temporal law)적 해석에 비추어 잔존해 있었다.⁴⁴⁾ 그렇다면 소련인들의 주장처럼 러일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중국인들의 주장처럼 청일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릴 것인가? 1차 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를 기정사실화한 베르사이유평화체제는 그것을 전쟁으로 부정할 것 자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용이 부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의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 시모노세키조약마저 부정된다면, 그것이 한국의 주권회복에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항일투쟁과 대 연합국외교가 한국의 주권회복과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는 컸다.

패전을 앞둔 일본은 1941년 4월 13일 5년 간의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소련을 통해 종전을 모색하면서 한국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종전(終戰) 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일본 종전외교의 중심에는 한국계로 주독일대사를 역임한바 있던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東郷茂徳, 1882~1950; 외무대신재임기간 41년 10월~42년 9월, 45년 4월~45년 8월), 1937년 외무대신을 역임하고 1942년부터 소련주재대사로 나가 있던 사토 나오타케(佐藤 尚武, 1882~1971), 도고에 의해 특사로 파견된

43) 전후 식민질서 복원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명섭, 앞의 논문(2005b), 279~283쪽

4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태진(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전 32대 총리 히로타 코카(広田弘毅 후일 외교관으로서 유일하게 도쿄전범재판을 통해 처형됨), 그리고 히로히토왕에 의해 특사로 파견된 전 34, 38, 39대 총리 코노에 왕자 등이 있었다.⁴⁵⁾

한국을 전후까지 영유하고자 했던 일본의 종전외교에 썩기를 박았던 것은 카이로선언을 확인한 포츠담선언이었다. 그리고 히로시마원폭투하와 이어진 소련참전은 일본 측의 종전외교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⁴⁶⁾ 그런데 포츠담선언문에는 카이로선언에서와는 달리 코리아라는 명칭이 거명되고 있지 않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한국문제에 대한 카이로선언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8)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⁴⁷⁾

그리고 알타협정문에서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이란 등이 독립된 장으로 처리되고,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들 중 외몽고, 여순(Port Arthur), 대련, 사할린, 쿠릴 등에 관한 명확한 언급과는 대조적으로 코리아라는 명칭이 거명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에 대한 언급도 존재하지 않는다.⁴⁸⁾

대신 카이로선언에서는 한국문제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다.

45) Shigenori, Togo, *The Cause of Japa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6, p. 287; Sigal, Leon V., *Fighting to a Finish-The Politics of War 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94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p. 26-86; Hasegawa, Tsuyoshi,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p. 51-56, 91-102, 120-126.

46) 소련의 참전과정에 관해서는 U. S. Department of Defens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manuscript,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Defense, 1955.

47) 포츠담협상이 해방이후 한국의 분단에 관해 지니는 의미에 관해서는 이완범, 「미국사료로 본 미국의 38선 획정 과정」, 하영선·김영호·김명섭(편),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139-161쪽. 포츠담선언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yale.edu/lawweb/avalon/decade/decade17.htm>.

48) 알타협정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yale.edu/lawweb/avalon/wwii/yalta.htm>.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⁴⁹⁾

카이로선언은 1차대전 이후 열강들이 일본의 한국영유를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취급했던 것과 달리 한국민의 노예상태를 명확히 언급하고 한국민이 자유와 독립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국제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카이로선언은 몇 가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열강들의 의향을 표현한 선언문으로서 국제적 조약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공여의사가 가지는 문제점이다. 셋째,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라는 표현이 지니는 모호성이다.

결국 한국의 해방이 국제적 주권회복으로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했다. 이것은 알타협정과 포츠담회담에서 2차 대전 이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기적 개최를 합의한 외상회의(Council of Foreign Ministers)의 모스크바회담(1945년 12월)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스크바회의의 결과 발표된 미·영·소 코뮈니케(12월 27일)의 제3장이 한국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장에는 한국의 독립을 다시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With a view to the re-establishment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임시한국민주정부(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를 수립하고, 남쪽의 미군사령부와 북쪽의 소련군사령부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4대국에 의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⁵⁰⁾

모스크바회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2차대전 이후 전세계적 평화조약 수립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외상회의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신탁통치에 관

49) 카이로선언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yale.edu/lawweb/avalon/wwii/cairo.htm>.

50) <http://www.yale.edu/lawweb/avalon/decade/decade19.htm>.

한 조항으로 인해 이 합의문은 한반도에서의 반탁운동이라는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았다. 모스크바합의의 실현이 불투명해지자 미국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 측으로서는 우세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소공위체제를 버리고 미국의 ‘기계적 다수’가 보장되어 있는 유엔으로 한국문제를 이관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진영으로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 측의 변화된 입장에 대해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공동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소련 측의 입장은 1947년 8월 15일 북조선주둔사령관 코로도코프가 계속해서 미소공위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을 다짐하고 있었던 데서도 확인된다.⁵¹⁾ 9월 17일 미국무장관 마셜이 조선문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을 공식 제안하자 유엔총회 소련 수석대표 비신스키(A. Y. Vyshinsky)는 “전조선문제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은 미·소간의 협정에 직접 위반되는 것”⁵²⁾이라는 반대연설을 하였다. 그러나 1947년 9월 23일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을 가결하였다.

미국은 국무장관 마셜의 유엔연설이 있던 1947년 9월 17일 오스틴(W. Austine) 대사를 통해 공식적인 미국의 안을 유엔에 제출해놓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의안에 대하여 소련진영은 즉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외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선거는 한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남북한으로부터 대표단이 초청되어 그들의 견해가 경청되어야 한다는 추가수정안을 제출하였다.⁵³⁾ 이러한 원칙은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장래문제를 논의할 때 이미 채

51) 《새한민보》, 27호, 1947년 9월 21일. 이하 한국문제의 유엔이관과정에 관한 논의는 김명섭 「분단의 구조화과정과 한국전쟁」, 『解放前後史의 認識 IV』(한길사 1989)에서의 논의에 의거하였다.

52) 《새한민보》, 1권 9호, 1947년 9월 하순. 이와 아울러 소련측은 “적국을 패배시키는 데 책임진 정부가 평화안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유엔헌장107 조에 의거하여 미소공위를 통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일반 민중들의 행동정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엔이 한국문제 해결에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찬성: 17%/반대: 83%, ○ 미·소군의 동시철수라는 소련측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57%/반대: 43% Kang, Han Mu,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Its Polioicy,” University of Cincinnati, Ph. D., 1970(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4), p. 179.

53) 《새한민보》, 1권 11호, 1947년 10월 중순.

택되었던 전례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도대체 누가 한국민을 대표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 서울의 하지는 “자신이 조선인 대표를 선택하거나 파견할 권한이 없으며, 남조선의 단독적 행위는 조선통일의 장래에 위험을 가져올 것”⁵⁴⁾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소련 측의 주장은 모든 한국민이 독립을 회구한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누가 대표하는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는 지정된 위원회의 과제로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굿리치(Leland M. Goodrich)는 후일 이 제안이 상당한 호소력을 지닌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⁵⁾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지는 수정안으로 나왔고, 그것은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약간의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의안으로 통과되었다.

1.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자유)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할 것.
2. 후에 통일정부를 수립할 전국적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한국에서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실시할 것.
3. 유엔위원단은 새로 수립되는 정부와 국가보안군에 관하여 협의할 것이며 그 군대에 포함되지 않는 군사적 혹은 반(半)군사적 조직은 해체할 것, 군사령부와 남북한의 민간당국으로부터 정부의 기능을 인수할 것, ‘가능한 한 90일 이내에 외국군대의 완전철수를 위한’ 방식을 마련할 것⁵⁶⁾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내에서의 활동은 물론 그들과 협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 그로미코는 다음과 같이 소련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54) Kelsen, Hans, *The Law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The London Institute of World Affairs, 1951, pp. 199, 809.

55)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 30.

56) “Résolutions adoptées par l’Assemblée générale au cours de sa cent-douzième séance plénière”(14 novembre 1947).

이와 같은 위원단의 구성이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민의 자결권과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한국의 식민지화를 목표로 한, 남한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은폐시켜주는 차양막이 될 따름이기 때문이다.⁵⁷⁾

한국문제에 관한 미·소의 대립을 주요쟁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미·소간의 쟁점과 양자의 입장

	미 국	소 련
남북한에서 선출되는 대표들로 임시정부 구성 후 연합국 측과 협의	미소공위 미국측 대표의 제안	반 대 남북 분열의 우려
한국문제를 미소공위에서 유엔으로 이관	미국무성 장관 마샬의 제안	반 대 모스크바합의에 배치 유엔헌장 107조 위반
미·소 양군의 동시철수 후 한국민의 자결	반 대 정부 수립 후 점령국과의 협정을 거쳐 점령군 철수	미소공위 소련측 대표의 제안
남북한대표의 유엔 총회 참석	반 대 점령국은 대표단을 선출할 권한이 없으며,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분단을 조장	소련외상 그로미코의 제안
유엔임시위원단의 활동	적극 협조	협조 거부

미소공위의 결렬과 미국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한국문제는 결국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결의안의 제2항을 통해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 한국은 유엔의 산파적 역할을 기리기 위해 유엔찬가를 대중에게 보급했고,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정

57) “A. A. Gromyko’s Speech on Korea in the U. N.”(November 13, 1947), Donald G. Tewksbury, ed., *Source Materials on Korean Politics and Ideologies*, New York: International Secretariat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0, p. 87.

해 1970년대 중반까지 법정공휴일로 삼고, 한국의 유일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유엔의 결의안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라 선거가능한 지역에 대한 유일합법정부였을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유엔총회결의 195(III)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sic]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즉 1947년 11월 제2차 유엔총회의 의결에 따라, 한반도 안에서 공정한 선거와 민주적인 정부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설치된 유엔임시위원단(UNTCOK;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와 자문이 가능했고, 한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그 지역(that part of Korea)에 대한 통제와 법적 권한을 지닌 유일합법정부라는 것이다.⁵⁸⁾ 이것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유일합법정부로 보는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의 후반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출된 유일한 정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겨져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에 기초하여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후자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확정하였다.⁵⁹⁾ 그러나 6·25전쟁 중

58) 1948년 12월 12일 결의 제 195(III)호 관련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Kim, Myongsob, “Reexamining Cold War History and the Korean Question,” *Korea Journal*, 41~42, Summer, 2001, p. 24.

59) 당시 이 문제에 관해 헌법 기초위원이던 유진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전문위원 유진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엔이 담당하였던 사실은 영토 주권문제에 대한 한국과 유엔의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⁶⁰⁾ 1991년 남북한유엔동시기입은 유엔이 인정한 유일합법정부논쟁에 중지부를 찍었다.

1948년에 이미 미국과 소련은 전전상황의 회복 원칙 대신 각기 점유상황을 고수하면서(Uti possidetis), 각각의 지역에 수립된 우호적 정부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소련이 각각 후원했던 정부에 공여할 수 있는 주권을 형식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직 일본이었다.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공식적으로 마감된 것은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되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⁶¹⁾ 서구문명권에 기초한 국제법적 개념에 따르면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 등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주장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이 샌프란시스코평화협상에 전승국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일본은 한반도에서 진행 중이던 전쟁의 와중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전승 5대국의 일원으로 패전국들에게 강요했던 평화조약문들의 가혹성에 비추어 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2차 대전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얼마나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체결된 조약인가를 알 수 있다.⁶²⁾

오): 영토에 관한 것은 안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단일국가이니까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이 적용된 범위가三八線 이남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영토로 삼어가지고 성립되는 국가의 형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원문대로]. <http://search.assembly.go.kr/record/>. 이와 같은 유진오의 언급은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이 다분히 남북한관계를 염두에 두고 삽입된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국제관계에서 영토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남과 북의 어느 쪽이 한반도의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만일 남북분단으로 치닫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면 논점은 임시정부의 헌법에 기록된 “구 한국의 판도”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로 모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 60) 김명섭, 「전쟁당시의 통일행정」, 『국제정세』, 제12호(1990. 6), 36-47쪽
- 61) 미국 등 연합국 49개국과 일본국 간에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오페라 하우스에서 체결되던 날, 수석 전권이었던 요시다 시게루 일본총리는 장소를 옮겨 미국 대표와 단독으로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 62) 일본이 감당해야 했을 구체적인 전쟁책임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이예나가 사부로, 현명철(역), 『전쟁책임』(논형 200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한국이 이처럼 불리한 위치에 처했던 데는 당시의 냉전적 상황과 더불어 1945년 한국의 해방이 국제적으로 ‘쟁취한 해방’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해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임시정부가 일본의 진주만공습 직후인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를 했던 사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⁶³⁾ 1942년 1월 1일 유엔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은 이 선언을 체결한 26 개국에 들어있지 않았다.⁶⁴⁾ 아울러 독일항복 이전까지 이 선언에 추가적으로 체결의사를 밝힌 21개국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⁶⁵⁾ 이것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해방’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터키 등과 같이 거리가 먼 나라들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조약의 체결국이 되지 못했다.

VI. 결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의 광기는 아직까지 완전히 봉인되지 못한 채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다. 특히,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억의 전쟁’을 낳고 있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쟁이라는 낱때기에 빨려 들어갔고, 그 때 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역사는 요동쳤다. 한반도는 그러한 전쟁의 결과로 강점되었고 했고, 해방을 맞이하기도 했다. 국내외적으로 한국인들이 벌였던 항일운동과 대 연합국 외교의 의미는 소중한 것이었지

63) 대일선전포고일이 12월 9일이 아니라 12월 10일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지식산업사, 2004), 173~188쪽. 오랫동안 대일선전포고일이 미국시간을 기준으로 한 12월 9일로 기념되어 왔던 것은 대일선전포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당시 임시정부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용례의 유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4) 당시 이 선언을 기초한 국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hina, Australia, Belgium, Canada, Costa Rica, Cuba, Czechoslovak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reece, Guatemala, Haiti, Honduras, Indi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orway, Panama, Poland, South Africa, Yugoslavia.

65) Mexico, Philippines, Ethiopia, Iraq, Brazil, Bolivia, Iran, Colombia, Liberia, France, Ecuador, Peru, Chile, Paraguay, Venezuela, Uruguay, Turkey, Egypt, Syria, Saudi Arabia, Lebanon.

만, 1945년의 해방이 그 직접적 결과는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의 이른바 ‘옥음방송’을 통해 전쟁행위의 중지가 선언되었다. 일본이 민족적/문명적 표준으로 앞세웠던 ‘천황’의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그렇지만 이 선언 자체가 한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회복시켜준 것은 아니었다. 1945년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대표단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기까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무력통치 역시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은 ‘미완의 광복’이었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고, 남쪽은 유엔을 통해 국제적 승인을 받았다. 북쪽은 항일전쟁에 이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쪽에 대한 전면전을 벌였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의 열전은 전세계적 냉전을 격화시켰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진행된 샌프란시스코평화협상의 결과는 한국의 주권회복에 관한 일본의 인정을 국제적으로 공인했지만, 6·25전쟁의 와중에서 왜곡된 아시아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가 남긴 유산은 현재까지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⁶⁶⁾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했던 한국은 1965년 일본과의 양자조약을 통해 이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관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미결된 상황이다. 대신 1991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으로 인해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에 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참고문헌

- 臼井勝美, 송한용(역), 『중일외교사연구』, 서울: 선인, 2004.
- 권명아, 「태평양전쟁기 남방 종족지와 제국의 판타지」, 방기중 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서울: 혜안, 2005.
- 김명섭, 「분단의 구조화과정과 한국전쟁」, 『解放前後史의 認識IV』, 서울: 한길사, 1989.
- 김명섭, 「전쟁당시의 통일행정」, 『국제정세』 제12호, 1990.
- 김명섭, 「서유럽의 통합과 동아시아의 분절: 냉전초기 미국의 지정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6)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명섭, 「서유럽의 통합과 동아시아의 분절: 냉전초기 미국의 지정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2호(2005a), 7~28 쪽

제45집 2호, 2005a.

김명섭,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탄생. 백영사(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서울: 창비, 2005b.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김인호,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서의 생산증강 정책과 그 실상」. 『역사와 경계』 52집, 2004.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4.

문명기, 「중일전쟁 초기(1937~39) 왕정위파의 화평운동과 화평이론」. 『동양사학연구』 71 권 2000.

배경환, 「중일전쟁 시기 중국에서의 동아연맹운동과 왕정위정권」. 『중국근현대사연구』 21 권 2004.

이에나가 사부로, 현명철(역), 『전쟁책임』. 서울: 논형, 2005.

이완범, 「미국사료로 본 미국의 38선 획정 과정」. 하영선·김영호·김명섭(편), 『한국외교사와 국제
정치학』.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이태진(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새한민보》

Brinkley, Douglas and David R. Facey-Crowther, *The Atlantic Charter*. Macmillan: London,
1994.

Brook, Timothy, *Documents on the Rape of Nank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9.

Chang, Iris, *The Rape of Nanking*. Penguin, 1998.

Coox, Alvin D., *Nomonhan: Japan against Russia, 193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Frei, Henry P., *Japan's Southward Advance and Australia*. Carlton, Victoria: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91.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Hasegawa, Tsuyoshi,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Iriye, Akira, "Japan Against the ABCD powers." Akira Iriye and Warren Cohen ed.,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Wartime Asia, 1931~1949*. Wilmington, Delaware:
SR Books, 1990.

Iriye, Akira, *Pearl Harbor and the Coming of the Pacific War: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and Essays*. Boston/New York: Bedford/St. Martin's, 1999.

- John Ray, *The Invasion of Japan: Alternative to the Bomb*.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
- Kang, Han Mu,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5~1948: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Its Policy." University of Cincinnati, Ph. D., 1970.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4.
- Kelsen, Hans, *The Laws of the United Nations*. London: The London Institute of World Affairs, 1951.
- Kim, Myongsob, "Reexamining Cold War History and the Korean Question." *Korea Journal*, 41-2, Summer, 2001.
- Masaaki, Tanaka, *What Really Happened in Nanking*. Tokyo: Sekai Shuppan, 2000[Kenkosha, 1987].
- Ovendale, Ritchie, *Anglo-American Relations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MacMillan Press, 1998.
- Petit Robert 2*. Paris: Le Robert, 1989.
- Schonberger, Howard B., *Aftermath of War: Americans and the Remaking of Japan, 1945~1952*. Kent, Ohio/London, England: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9.
- Sekiguchi, Takeo, "The Wartime Role of Manchoukuo." *Contemporary Japan: A Review of East Asiatic Affairs* 13, February 1944.
- Shigenori, Togo, *The Cause of Japa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6.
- Sigal, Leon V., *Fighting to a Finish-The Politics of War Ter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194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 Spinks, Charles Nelson, "The Man Behind in Japan." *Asia & Americas* 43, April 1943.
- Springhall, John, *Decolonization since 1945: The Collapse of European Overseas Empires*. New York: Palgrave, 2001.
- Suyin, Han, 長尾喜又(역), 『無島の夏』. 春秋社, 1972.
- Tewksbury, Donald G. ed., *Source Materials on Korean Politics and Ideologies*. New York: International Secretariat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0.
- U. S. Department of Defense,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manuscript,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Defense, 1955.
- U. S. Department of State, *Peace and War: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31~1941*.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3[1983].

USS Panay Sunk. <http://history.sandiego.edu/gen/st/-pbugler/>.

Williams, David, *Defending Japan's Pacific War: The Kyoto School Philosophers and post-White pow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Yano, Toru,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etting the stage for the cold war in Southeast Asia*. Kyoto: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Kyoto University, 1975.

“Acting Secretary of State Sumner Welles’ statement on Japanese-French Collaboration in Indochina.” 24 July 1941.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6 July 1941.

“Résolutions adoptées par l’Assemblée générale au cours de sa cent-douzième séance plénière”(14 novembre 1947).

Chronique d’une guerre oubliée: La guerre d’Indochine, 1945~1954. Coffret de 5 cassettes.

Durée 7 h. Cassettes Radio France.

《New York Times》

<http://search.assembly.go.kr/record/>.

<http://www.hermuseum.go.kr/index.jsp>.

<http://www.ibiblio.org/hyperwar/Dip/PaW/PaW-7.html>.

<http://www.ibiblio.org/pha/policy/1941/410729a.html>.

<http://www.mtholyoke.edu/acad/intrel/WorldWar2/japan.htm>.

<http://www.yale.edu/lawweb/avalon/decade/decade19.htm>.

<http://www.yale.edu/lawweb/avalon/wwii/cairo.htm>.

<http://www.yale.edu/lawweb/avalon/wwii/s1.htm>.

<http://www.yale.edu/lawweb/avalon/wwii/yalta.htm>.

● 투고일 : 2005. 10. 31.

● 심사완료일 : 2005. 11. 30.

● 주제어(keyword) : 아시아-태평양전쟁(the Asia-Pacific War), 2차 세계대전 (the Second World War), 한국(Korea), 주권(sovereignty), 평화(peace),